

## 시론



진 창 수

- (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제9대 세종연구소 소장

## 한일정상회담: 과연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될 것인가?

12년여만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문제의 해법을 발표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에서조차 윤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의 속도감에 놀라고 있다. 3월 1일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본격화된 대일정책의 대전환은 그 후 강제징용해법에서 구현되고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은 첫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인식한 것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방해자로 인식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의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인식한다. 둘째 강제징용해법에서도 윤 정부는 높아진 한국의 국력에 맞게 대승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과거사문제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고, 일본은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제는 한국의 대일 자세도 '피해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력에 맞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강제징용해법에서도 구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법으로 미래를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윤정부는 현재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배상금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피해자들의 권리실현방법을 외면하고 일본의 사죄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윤 정부의 강제징용해법은 현금화조치를 법적으로 완결시켜 한일관계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즉 한국이 경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일관계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실현된 한일정상회담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구상의 시작이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윤 정부의 대일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벌써 25년 전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도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였다. 여야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발표 당시에는 국내에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현재 야당이 비판하는 ‘삼전도의 굴복’이나 ‘굴욕외교’의 주장은 1998년 당시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BTS와 블랙핑크에 보듯 한류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한일관계의 과거사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윤 정부의 대일정책 대전환이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설명한 외교정책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앨리슨은 외교정책결정 과정을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모델, 그리고 관료정치모델이라는 세가지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가 지도자가 합리성에 근거하여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조직운영의 표준절차(SOP)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모델은 미리 정해진 정책 중에서 이익의 극대화한 것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관료정치모델도 부처의 이익이 국가이익을 우선한다고 보았다. 외교정책에서조차 부처간의 밀고 당기기의 타협과 흥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념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명한다.

윤 정부의 대일정책이 과연 과거사를 넘어 미래를 만드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해당하는지는 지금부터가 시험대이다. 생존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의 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제3자 변제를 통해 판결금을 수령하기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공탁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정권교체 후에도 구상권 행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지속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윤 정부의 과거사 관리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노력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는지에

달려 있다. 그 교훈은 2015년 위안부합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의 후속조치에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의를 보였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정부는 외교적 성과에만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 그 이후 위안부 문제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여 한일 갈등은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윤 대통령의 대일정책 구상에서 보면 지금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앞으로 윤 정권의 성과와도 관련되어 있다. 한일관계 역사에서 보면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발전시킨 정부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일본과 역사전쟁을 시작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면서 영토전쟁에 불을 지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로 대화조차 단절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죽창가를 앞세우며 반일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은 불신의 벽이 지나쳐 반일과 혐한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윤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일정책 구상도 벌써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다. 야당이 외교적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념적 정쟁의 도구로 인식하면서 비판만 하기 때문이다. 강제징용해법도 여야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것이다. 더 나아가 애국과 매국으로 몰고가 전략외교의 공간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16일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실현될지 초미의 관심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성과는 미지수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한일 양국이 협력의 방향성을 함께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그 성과를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정상회담의 장점은 그 당시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관심도 여전히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 표현을 어떻게 할지 과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기시다는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일본도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